

## 가상자산업권법TF 국회 세미나

# 왜 가상자산업권법 필요한가?

2021.4.9(금) 오전 10:00~12:30

주최

김병욱 국회의원



coindesk  
KOREA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원



bithumb

UPbit



Paycoin

GOPAX

# 1. 개회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8000만원에 육박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의 거래액은 총 24조 7천 억원으로, 이는 코스피 거래액보다 10조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자카드와 테슬라, 스타벅스 등 해외 공룡기업들도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정부는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작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하여 통과시켰던 ‘특금법’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내외 가상자산의 현황을 점검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업권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라는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기에,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저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함께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에 있고,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연속 간담회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가상자산 제도화의 현재 진행상황과 개선 사항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향후 다가올 시장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노력해주신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블록체인협회 관계자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분을 비롯하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튼튼한 기반이 될 법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개회사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

가상자산업권법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시세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인들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김병욱 국회의원께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김병욱 의원님의 입법활동에 코인데스크코리아가 힘을 보탬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이어서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제정되는 날까지 코인데스크코리아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계신 네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김병욱 의원님,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3. 개회사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가상자산업권법이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갈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었고,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의 36%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BNY멜론과 블랙록,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금융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는 달러와 연동하는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최대 결제 기업인 페이팔도 가상자산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이용자의 금융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이 예고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 그리고 금융과 상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일 거래량이 8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권법 마련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께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유신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에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에 맞추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이 창의적 진화과정을 거치며 건전하게 성장하여,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금융과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 1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주최

김병욱 국회의원



coindesk  
KOREA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원



bithumb

UPbit



Paycoin

GOPAX

#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철 편집장

1

## 순서

1. 가격 현황
2. 거래 현황
3. 투자자 피해 현황

2

## 1. 가격 현황



**비트코인(BTC)**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1207조원**

(21년4월7일)

**전고점 7950만원**

(21년4월6일)

3

## 2. 거래 현황

-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 : 9,000개
- 가상자산 시가총액 : 1조9000억달러(2145조원)
- 24시간 거래량 : 2000억달러(223조원)
- 점유율 : 비트코인: 55% / 이더리움 : 12%

코인마켓캡 21년4월8일 오후 6시 기준

4

## 2. 거래 현황

- 국내 거래소 : 100여개 추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14곳
- 9월24일까지 FIU 신고

5

## 3. 투자자 피해 현황

### 거래소 해킹

국가	거래소	해킹 규모 (당시 추정 금액)	시기
영국	엑스모	130억원	2020년 12월
뉴질랜드	크립토피아	178억원	2019년 1월
중국계	바이낸스	470억원	2019년 5월
한국	업비트	580억원	2019년 11월
한국	빗썸	221억원	2019년 4월

6



### 3. 투자자 피해 현황

#### 거래소 출금 지연



**"내 돈 돌려달라" 비트소닉 출금지연**  
불 꺼진 사무실, 문 닫힌 고객센터

함지현 © 2021년 3월31일 22:39

서울 강남구의 비트소닉 오피스(고객센터가 위치한 4층 전체) 불이 꺼져있었다. 출처=함지현/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문영사 스퀘어미디어)이 '개점 휴업'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많은 비트소닉 이용자들은 원화와 암호화폐가 출금되지 않 는다며 강하게 항의 중이다.

7

### 3. 투자자 피해 현황

#### 폐업 주의보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 주의해야"**  
3월25일 거래소 신고제도 시작 - 9월까지 신고자에게 "일부 거래소, 신고받고 폐업할 가능성"

박근모 기자 © 2021년 3월16일 10:52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오는 3월25일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을 조심하라고 경고 했다.

**정부 "가상자산 시장 과열"...시세조각 단속 나선다**  
정부 "가상자산은 금융투자 상품 아냐" 암호화폐 시세조각 자금세탁 담배 단속

박근모 기자 © 2021년 4월7일 22:56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 예 방을 위해 암호화폐 시세조각, 탈세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 이다.

8

# 발표 2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전망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최

김병욱 국회의원



coindesk  
KOREA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원



bithumb

UPbit



Paycoin

GOPAX

# 가상자산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21년 04월 09일 | 박종백 변호사

1

## CONTENTS

Privileged & Confidential

<b>I. 제도화와 그 필요성</b>	<b>II. 제도화의 현황</b>	<b>III. 제도화의 내용</b>	<b>IV. 가상자산업권법 의의와 필요성</b>
1. 제도화란	1. 글로벌 규제 수립현황	1. 가교 샌드박스	1. 제도화의 본격화 신호
2.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	2. 한국의 제도화 단계 Roadmap	2. 출발점	2. 최소한 규제
		3. 규제/행정법규	3. 금융산업과 금융 규제방식
		4. 민사법영역	
		5. 형사법 영역	

2

bkl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가상자산 제도화와 그 필요성

3

3

## 글로벌 동향과 변화

bkl

US regulator OCC says banks can participate in stablecoin networks



Privileged &amp; Confidential

Tesla cars can be bought in Bitcoin



중국 대도시 잇따라 디지털화폐(CBDC) 사용 시험  
"지도부 의중 반영"  
금융 입력 2021-01-26 11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2019년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외신 "디파이,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MiCA' 추진 후 존폐 기로에 설 수도"  
European Union: MiCa —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EU 집행위원회 MiCA 초안 유출... "가상자산, 기존 금융상품과 동일 취급"

4

4

한국은?

bkl

✦ 특금법 시행령 내놓은 정부..."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냐"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14일까지 40일간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다시 뜨거워진 '가상자산'...제도화는 '먼 얘기'  
·머니투데이박광범 기자

✦ 가상화폐 내년부터 양도세 20%...'주식과 과세차별'  
반응도  
2021년 2월 22일

✦ 정부,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주의'  
메시지..."금융투자상품 아니다"  
[임유경 기자](#) 입력 :2021/04/08 07:23

5

5

## I. 제도화와 그 필요성

가상자산의 제도화란?

bkl

### 가상자산과 암호자산의 의미와 적절성

제도화란?

가상자산의  
가치와 유용성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국가 사회규범체제로 일정하게 형식화
- 경제적, 기술적, 법령/규제 측면 전반적으로  
market standard 확립하고  
작동시스템 체계화함
- 전반적인 국가 사회, 경제체제로 편입, 분야별 유기적으로 연관 작동 가능
  - 특정목적, 특정분야 한정적인 경우?
  - 합법화와 동일한 의미?

&gt;

03

6

6




## I. 제도화와 그 필요성

bkl




혁신은 장려하되, 위험은 관리하여야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가상자산관련위험

-  다양한 토큰유형의 식별, 분류, 분석 종합적인 framework 부족
-  -경제적, 기술적, 규제적 불확실성 확대  
-관련 당사자들 위한 투명성 부족
-  운영위험, 투자자와 모든 참여자에 대한 위험, 시장왜곡위험 대두

### 가상자산의혁신

-  -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  - 글로벌 규모로 기업과 사회전반에 확산
-  - 유용성과 가치를 제공

7

## II. 주요국가의제도화현황

bkl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미국

- 선물거래 인정
- 비트코인 ETF 불승인
- 비트코인 펀드 설립
- ICO 토큰의 증권신고가능
-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가능
-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결제업무 가능

### 유럽

- MiCA Regulation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발행인은 일정요건 법인 한정  
스테이블 코인
- 프랑스-ICO 라이선스
- 독일-STO 가능
- 영국-Law Commission의 Smart Contract, Call for Evidence  
FCA의 암호자산 Guidance

### 중국, 일본

- 중국  
국내 ICO, 암호화폐 거래금지  
인민폐 CBDC
- 일본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상 이용자보호규정

8

## I. 가상자산제도화의 현황

bkl

### 한국의 제도화 현황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01 제도화가 아닌?

특금법/시행령 개정  
2021.3.25 시행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유예

#### 02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 2022.1.1부터

#### 03 2017말 - 2018년 사이

정부의 정책 보도자료  
금융위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 04 2019년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  
- 특금법 시행 첫날에 거래소  
통해 환가

#### 05 혁신금융서비스, 부산특구 샌드박스 지정

9

9

## II. 가상자산제도화 현황

bkl

### 한국의 제도화 단계 Roadmap

Privileged &amp; Confidential

#### 1. 억제와 적극 방입

-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 가상자산은 억제
- 가상자산과 업의 risk에 대한 대책 위주
- 혁신과 새로운 가치, 유용성 평가절하
- 제도 논의와 수립은 방입

#### 2. 실제현상(de-facto)인정

- 다양한 암호자산 서비스(ICQ, 거래소, 수탁, 집합투자, DeFi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암호자산 등장
- 위험과 가치를 동시에 균형감 있게 인정, 분석하는 단계

#### 3. 규범체계로 본격적 편입

- 기본 법령체계에 포함하거나(개정, 해석론)
- 신법령 제정(업의 존립의 최소한 근거, 투자자/이용자 보호, 업의 활성화와 혁신장려 목적)

#### 4. 글로벌 신규법체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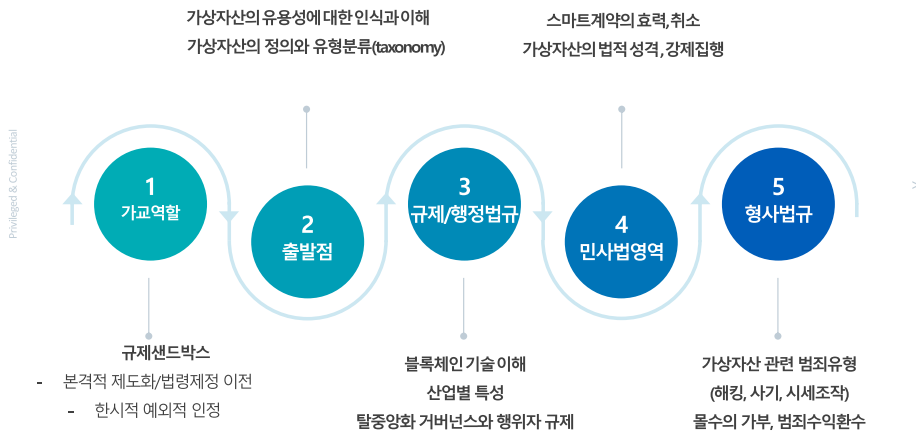
- 가상자산의 태생적 글로벌 성격 확대
- 우호적 규제 국가로의 쏠림
- 단일 국가규범력의 한계
- 국제적/초국가 글로벌 신규법 논의

10

10

### III. 가상자산 제도화의 내용

bkl



11



## Crypto Asset Taxonomy

KCCR(한국 암호자산컨버전스 연구그룹)

\*가로축 오른쪽 방향 : on-line 소재성이 강해짐. 강제집행의 난이도 증가

\*세로축 아래 방향 : decentralization의 정도가 강화. 플랫폼 이익 귀속주체의 명확성 감소

본 Taxonomy의 용도 : 한국내 공감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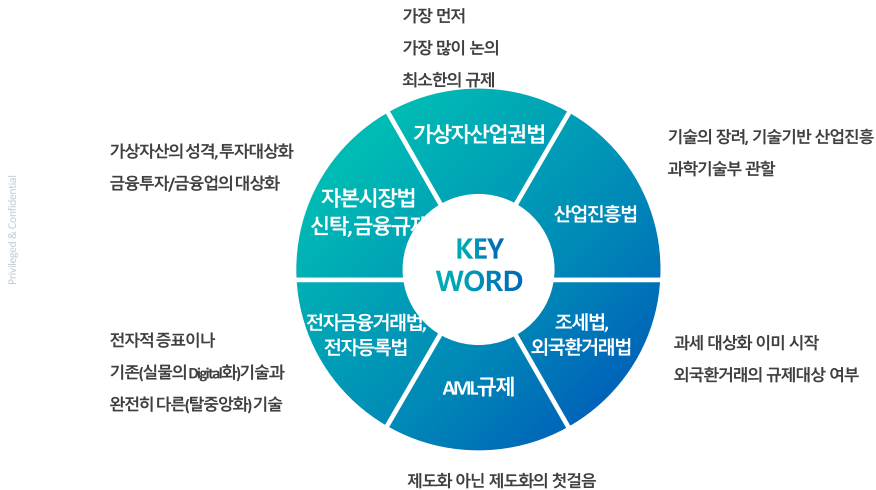
가상자산과 업을 규범 체계로 편입, 제도화를 위해 →규제 MAP으로 연결

Asset의 소재지 Decentralization 정도(행위주체의유무)	물리적 전통자산의 토큰화 (Off-line기초자산있음)	기존증권(통화)의 토큰화	완전히 새로운 토큰 On-line Data만 존재 Digital, DLT로만 존재
Private Blockchain 단독 또는 소수 노드	·플랫폼운영자가 특정 된 시험적 STO 토큰 예: 초기 Libra ·K,S사 디지털수익증권 거래플랫폼	CBDC 주식,채권등의 토큰화	대부분의 ICO 토큰(유틸 리티, 지급수단)
Public Blockchain이나 운 용책임주체, 관여,기여자 특정가능	법정통화 or 기존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관주체 존재)	·증권거래소의 블록체 인 플랫폼화 ·과도기적 DeFi	기초자산없이 알고리즘 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
Fully Decentralized Public Blockchain에 존 재,거래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 랙트로 거래완결	ERC71기반 NFT(물리적 작품에 기반)		비트코인 이더리움 Pure한 DeFi  디지털작품의 NFT

### III. 암호자산의제도화내용

규제/행정법규

bkl



1

### III. 가상자산제도화의 내용

탈중앙화에 대한 새로운 규범 필요

bkl

**탈중앙화의 이념과 구현형태 이상과현실의 괴리**

**이상:** 이상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에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모든 참여자가 정해진 합의알고리즘에 따라 행위하고,  
특정인이 지배, 통제하지 않으며  
트랜잭션 생성, 합의, 블록생성, 기록 보존이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지속됨.

**현실:** 단독노드, 플랫폼의 생성, 관리, 통제자가 정해진 구조와 이상적 구조의 중간에 위치

**규제정립시 새로운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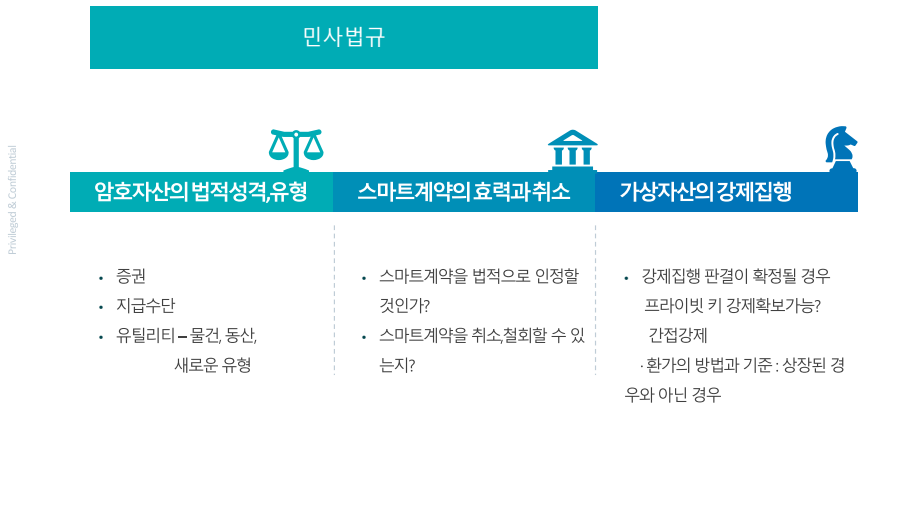
탈중앙화 기술/구조/작동방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또는 탈중앙화를 내걸고 중앙화 요소를 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개발자, 노드, 가버넌스의결권자, 서비스제공자)이 누구인지,  
관여 행위의 성격은 무엇인지, 기존의 행위와 다른지,  
관계자의 의무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

2

### III. 가상자산제도화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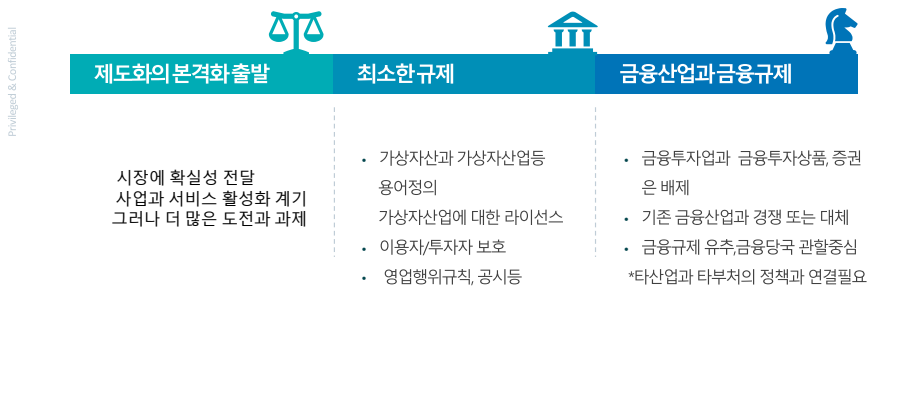
bkl



3

### IV.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의의

bkl



4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20년 04월 09일 | 박종백 변호사

Any Question ? [jb.park@bkl.co.kr](mailto:jb.park@bkl.co.kr)

# 발표 3

가상자산업권법: 사업자 SIDE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최

김병욱 국회의원



coindesk  
KOREA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원



bithumb

UPbit



Paycoin

GOPAX



## 가상자산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021. 4. 9. | 조정희 변호사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1

### 목차

- 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필요성
- II. 해외사례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2

## 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필요성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3

SHIN & KIM

## 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필요성

→ 특금법이 FATF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목적에 한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 가상자산업의 규율 및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일반적 사항(정의, 진입규제 등)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공시, 이해상충방지 등)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

가상자산업법의 영역

가상자산업 일반  
이용자 보호

특금법의 영역

AML/CFT

4 | 법무법인(유) 세종

4

## II. 해외사례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5

SHIN & KIM

## II. 해외사례

### ① 미국

#### ▶ 뉴욕 BitLicense

- 뉴욕시는 2015년 최초로 가상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를 발표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이하 "NYDFS")의 가상화폐사업(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



- 당국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

6 | 법무법인(유) 세종

6



## II. 해외사례

### ① 미국

#### ▶ 뉴욕 BitLicense

- 모든 장부 및 기록을 원형 그대로 작성된 후 최소한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독기관이 해당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보관

- (i) 보증금 유지의무
- (ii)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준의 가상화폐 보유의무
- (iii) 감독기관의 조사를 수용할 의무
- (iv) 회계장부 제출의무
- (v)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비롯한 돈세탁방지의무
- (vi)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구축의무
- (vii) 보안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임명의무

7 | 법무법인(유) 세종

7

## II. 해외사례

### ② 프랑스

#### ▶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

- 공모형 ICO 승인 자율선택 제도(optional visa regime):  
AMF 승인을 받고 유틸리티 토큰의 공모형 ICO를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기존의 증권법규제로 커버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 발행은 종전법을 적용하는 원칙 유지
- 공모형 유틸리티 토큰 발행인이 당국의 규제범위로 들어올지 여부를 자율 선택할 기회 부여
- 디지털자산사업자 일부 의무등록, 기타 인가 자율선택제도
- 제3자를 위한 디지털자산접근권 수탁보관 및 법정통화를 매개로 디지털자산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는 의무등록
- 공모형 ICO 토큰 발행인 및 등록/인가사업자의 AML/CFT 의무화
- 디지털자산 투자펀드 조건
- 투자자보호 장치

8 | 법무법인(유)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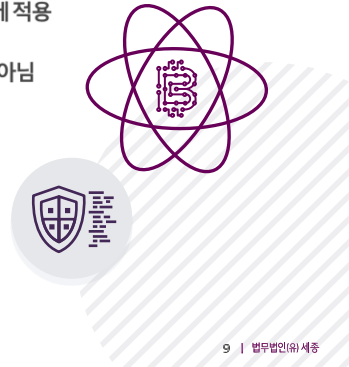
8

## II. 해외사례

### ③ 홍콩

-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 가상자산거래플랫폼 규정 (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

- FATF 권고안 이후 발표된 규정(2019년 11월 6일)
- 적어도 하나 이상의 security token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적용
- Non-security token만 거래하거나 P2P 거래는 대상이 아님



9 | 법무법인(유) 세종

9

## II. 해외사례

### ③ 홍콩

- ▶ SFC가 플랫폼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직업적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일 것
-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약관”을 준수할 것
- 새로운 서비스나 활동의 개시 또는 기존의 서비스나 활동의 변경이 있을 때 사전에 SFC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것
- SFC에 매월 월간 리포트를 제출할 것
- SFC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독립된 전문 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그 활동에 대해 검토하게 하고 허가 요건 및 모든 법률/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10 | 법무법인(유) 세종

10

## II. 해외사례

### ④ 일본

#### 1.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에 대한 근거 마련

##### ▶ “암호자산 교환업”

- ① 암호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 암호자산과의 교환,
- ② 위 ①의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 ③ ① 또는 ②의 행위에 관하여 이용자의 금전을 관리하는 것
- ④ 타인을 위하여 암호자산의 관리를 하는 것  
(해당 관리는 업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11 | 법무법인(유) 세종

11

## II. 해외사례

### ④ 일본

#### 2. 진입요건: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등록

- 재산적 기초 (자본금 1000만엔, 순자산 플러스 요건)
- 시스템안전대책,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 ▶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법정화폐와 암호자산과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의무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투자자 자산을 거래소 자산과 엄격히 분리시켜, 투자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맡기게 함
- 해킹에 대비해 투자자 보유 암호화폐는 콜드월릿에 보관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핫월릿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출권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동일한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함
- 23곳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상장은 금융청의 화이트리스트 코인 심사를 거쳐야 함
- 외부감사의무
- 감독당국에 의한 감독과 자율규제의 병행

12 | 법무법인(유) 세종

12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13

SHIN & KIM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1 주요 용어의 정의

- 현재 제정 되어 있는 특금법상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좀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규정

####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 법무법인(유) 세종

14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1 주요 용어의 정의

##### 가상자산업의 정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 및 나.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향후 DEFI와 같은 새로운 영업형태를 시행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

15 | 법무법인(유) 세종

15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1 주요 용어의 정의

#####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란 제13조에 따라 가상자산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한다.

16 | 법무법인(유) 세종

16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2 진입규제



진입규제의 형태: 신고

기본적으로 특금법상의 신고 내용을 반영하되, 해당 사업에서 법화와의 교환이 예정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17 | 법무법인(유) 세종

17

### III.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2 진입규제

-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4 운영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5 임원이 제1조 제1항에 적합할 것
-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8 | 법무법인(유) 세종

18

### Ⅲ.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4 영업행위 규칙의 일반사항

##### ▶ 신의성실의무

- 1 가상자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2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 법무법인(유) 세종

19

### Ⅲ.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4 영업행위 규칙의 일반사항

##### ▶ 이해상충의 관리

- 1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2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3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 법무법인(유) 세종

20

### Ⅲ.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4 영업행위 규칙의 일반사항

##### ▶ 가상자산업협회 설립 등

-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1 | 법무법인(유) 세종

21

### Ⅲ. 업권법으로서의 가상자산업법의 주요 내용

#### 4 영업행위 규칙의 일반사항

##### ▶ 가상자산업협회의 업무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①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②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 ③ 가상자산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 ④ 표준약관 및 가상자산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행위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 ⑥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 ⑦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2 | 법무법인(유) 세종

22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 감사합니다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T. 02 316 1624  
E. jhcho@shinkim.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EL: 02 316 4114 | FAX: 02 756 6226

[www.shinkim.com](http://www.shinkim.com)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 4

가상자산업권법: 이용자 SIDE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주최

김병욱 국회의원



coindesk  
KOREA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원



bithumb

UPbit



Paycoin

GOPAX

#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 필요성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1

## 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필요성

### 1. 개관

### 2.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필요성

### 3. 외국의 입법례

3-1. 미국 Bitlicense

3-2. 프랑스

3-3. 일본

### 4.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INDEX

2

## Part.1

### 개관

jongho Kim <jongho@basic.finance>



3

#### 1. 개관

o 가상자산 일 거래량의 규모가 코스피 일 평균거래액을 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2021. 3. 14.자 국제뉴스 기사 “코스피 따라잡은 가상화폐 거래량 압도”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198>)

o 2021. 3. 25.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고제 도입예정

▣ 사업자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은 개선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나 사업자들의 운영형태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신고제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나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건전한 사업자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한 상황임



4

## Part.2

###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jongho Kim <jongho@basic.finance>



5

## 2.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 갑작스런 거래소 출금 제한, 해킹 때문일까

이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채굴자 동향(6/26~7/2)



크립토퀀트

© 2020년 7월4일 16:30

암호화폐 거래소에 발생하는 대규모 해킹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킹된 암호화폐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뿐 아니라, 시장 신뢰도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래소 해킹 여부는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 중단조치를 내린 후에 뒤늦게 올라오는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각 거래소의 출금량 데이터(Exchange's Outflows)를 보면 거래소 공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거래소의 해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크게 '지갑관리 시스템 업데이트'와 '거래소 해킹' 2가지이다. 전자는 해당 거래소의 출금량 데이터가 0이 되기 직전의 차트에서 별다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킹의 경우에는 출금량 데이터가 0이 되기 직전에 출금량이 폭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6

## 2.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 거래소 직원들의 암호화폐 거래금지...진짜일까?

미국 시드CX의 엄격한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



Leigh Cuen

© 2018년 12월31일 11:00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해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알렉스 와솔리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시드CX(Seed CX)에 합류하기 전 많은 고민을 했다.

시드CX의 일원이 된다는 건 더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시드CX는 약 40명의 직원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와솔리는 요리강령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감사팀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감시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넘겨주어야 했고, 암호화폐에 더는 손을 댈 수 없게 됐다.

와솔리는 거래소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면 고객을 상대할 때, 그리고 여러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시험해보고 선택하려고 모인 것이 아님을 안다. 승자를 가려내는 건 결국 시장의 몫이다. (시드CX의)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타당한 목표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작년에 조용히 시행된 시드CX의 이 정책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전통적인 자본 시장에서는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해도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도입, 시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명확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는 황야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 제너앤블록(Jenner & Block LLP)의 소송담당 변호사 저스틴 스테픈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내부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리는 법률 용어 "공개 중요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NPI)"를 언급하며 "우리는 아직 암호화폐 세상에서 MNPI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 2.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 "손실 은폐" 가상화폐 테더, 美 검찰과 200억원

조선비즈 |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2.24 08:04

가상화폐 발행 업체 테더, 유동성 위기 고객에 숨겨  
 비트코인엑스, 9000억원 접근권 상실한 사실 은폐  
 뉴욕주 검찰 "보편적이고 막대한 손실 절저히 숨겨"



비트코인 로고, AP/연합뉴스

가상화폐 발행 업체 테더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엑스가 거래의 금융 손실을 은폐한 혐의로 1850만 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이 23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날 '스테이블 코인'(가상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은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가 유동성 중인 테더 코인(개당 1달러)에 턱없이 부족한 달러화를 보유하고, 2017년 중반부터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엑스는 지난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헤퍼탈에 넣긴 8억5000만 달러(약 9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이미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자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래를 지원받았으나 양측 모두 해당 사실을 고객에 공개하지 않았다.

## Part.2

### 해외 입법례



9

### 3. 외국의 입법례

#### 2-1 미국 Bit license

- o 고객 자산 유지 : 라이선스 소지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지정한 형태와 금액의 보증증서(Surety Bond) 또는 신탁계정(Trust Account)을 미국 달러로 유지해야 하며, 신탁계정은 적격한 관리자(Qualified Custodian)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o 설명 의무 : 라이선스 소지자는 고객과 관계를 확립하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 소지자의 상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모든 위험(예: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며, 법률의 변경은 가상화폐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상화폐는 사기 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정보 등), 일반 약관(Terms & Conditions) 및 계약 조건(예: 거래 금액,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및 수수료, 가상화폐 거래의 유형과 성격 등)을 영어와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명확하고 읽기 쉬운 서면의 형식으로 고객에게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10

### 3. 외국의 입법례

#### 2-1 미국 Bit license

o 분쟁해결 정책 : 라이선스 소지자는 고객의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 보관해야 하며, 라이선스 소지자의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장소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만약 라이선스 소지자가 분쟁 정책 및 절차를 변경하였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해야 함

### 3. 외국의 입법례

#### 2-2 프랑스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정의

• **디지털자산(MFC Art. L. 54-10-1)**

1. 금융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토큰(MFC Art. L. 552-2)
1. 중앙은행•공공당국이 발행 • 보증한 것이 아닌 증권의 디지털 표시로서 법정 화폐에 필요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화폐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하나 사람들이 교환의 매개로 받아들이고 전자적으로 저장 • 교환 • 전송이 가능한 것



## 3. 외국의 입법례

## 2-2 프랑스

##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의 정의

• 디지털자산서비스 제공업자(DASP)는 다음을 영위하는 사업자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자를 위하여 디지털자산 •접근권 수탁 보관</li> <li>2. 제3자를 위하여 법정통화를 매개로 디지털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li> </ol>  | → 의무등록 대상 업종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디지털자산의 거래</li> <li>2. 디지털자산 주문의 접수 •전송</li> <li>3. 디지털자산 포트폴리오 운용</li> <li>4. 디지털 자산 투자 자문</li> <li>5. 디지털 자산 인수</li> <li>6. 디지털자산 총액인수</li> <li>7. 디지털자산 모집 주선</li> </ol> | → 인가 여부 선택가능한업종 |

## 3. 외국의 입법례

## 2-2 프랑스

선택형 인가를 받기 위한 DASP의 준수요건(AMF Instruction DOC-2019-23) : 선택형 인가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보험 증서 및 전문 보상 보험 정책 또는 신청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수준을 갖도록 보장하는 수단
- 내부 통제 기능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활동에 할당 된 인적 및 기술 자원에 대한 설명
-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 3 자에게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위탁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정된 정보 시스템의 복원력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 3. 외국의 입법례

#### 2-2 프랑스

선택형 인가를 받기 위한 DASP의 준수요건(AMF Instruction DOC-2019-23) : 선택형 인가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함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있는 **이해 상충을 감지, 예방 및 처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
- 회사가 자동화 된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백업 시스템 및 위험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회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위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
-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를 확인하기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
-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위한 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

### 3. 외국의 입법례

#### 2-3 일본

##### 자금결제법 제2조 (정의)

⑤ 이 법에서 "암호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기록이전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물품구입, 임차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구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 기타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에 한하여 일본통화와 외국통화 및 통화건자산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이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전 호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cf) 금융상품거래법은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명시하였는데, 금융상품의 가격 및 이율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므로 암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음

### 3. 외국의 입법례

#### 2-3 일본

#####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⑧ 이 법에서 "금융상품거래업"이란 다음의 행위(그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은행우선출자법(…) 협동조직금융기관(이하 "협동조직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제2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28조 제8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의 매매(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시장파생상품거래(...) 또는 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
2. 유가증권의 매매, 시장파생상품거래 또는 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 중개인, 중개(...) 또는 대리인(...)
6. 유가증권의 인수(유가증권의 모집, 판매, 사모, 특정이용자에 대한 매수권유 등 제6항 각호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유가증권(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한한다)의 모집 또는 사모

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동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권리

##### 제29조 (등록)

금융상품거래업은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 외에는 수행할 수 없다.

### 3. 외국의 입법례

#### 2-3 일본

##### 자율규제기관의 지정

자금결제법 및 그 시행령(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관한내각부령,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に関する内閣府令)에 따라 지정된 자율규제기관(이하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JVCEA )

- 사단법인으로 암호자산교환업의 적절한 수행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암호자산교환업자를 회원으로 하며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규, 지식, 능력, 자산을 보유
- 현재 위 협회는 암호자산교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회원을 지도 및 감독
- 이용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분쟁해결창구를 제공

### 3. 외국의 입법례

#### 2-3 일본

##### JVCEA 운영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의 건전한 운영 및 분쟁해결방침

- 회원의 윤리 코드의 보유 및 준수에 관한 규칙
- 재무 관리에 관한 규칙
- 직원 등의 복무에 관한 규칙
- 가상통화 관련 정보의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관한 규칙
- 긴급 대응에 관한 규칙
- 이용자 관리 및 설명에 관한 규칙
- 이용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칙
- 불만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 3. 외국의 입법례

#### 2-3 일본

##### JVCEA 운영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

##### 암호자산관련 일반 규정

- 가상 통화의 취급에 관한 규칙
- 새 가상 통화의 판매에 관한 규칙
- 모집 및 광고 등에 관한 규칙
- 주문 관리 체제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증거금 거래에 관한 규칙
- 부정적 거래 방지를 위해 거래 심사 체제의 정비에 관한 규칙

## Part.4

###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21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3-1 원칙

##### 이용자 보호 관련 고려 사항

-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나 내부정보 이용행위 또는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이러한 규정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가상자산에 까지자본시장법상 내부통제 또는 이해상충방지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업계의 규모 등을 고려할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소비자에게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에 유용한 부분 부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범위가 확장되면 그에 맞춰 규제의 강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프랑스의 규제는 DASP에게 여러가지 영업행위 규칙을 부여하면서도 인가된 DASP에 대하여 예금계좌 및 지급서비스에 대하여충분하고도 포괄적인 접근권한및 접근 불허시 그에 대한 항변 절차 및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가상자산업권법에서도규제와 권한이 조화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임



22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 3-1 원칙

## 4.1 내부통제

**제00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 4.2 이해상충방지

**제00조(이해상충의 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4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 4.3 광고 규제

**제00조(광고)**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4.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상자산 사업에 대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 4.4 자산의 분리보관

**제00조(자산의 분리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유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분리보관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 4.5 자율규제

**제00조(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내부정보 이용 금지 등의 경우에는 현재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율규제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4.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

## 4.6 보상보험

**제00조(이용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용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이용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감사합니다 .



# 발표 5

가상자산업권법 쟁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주최

김병욱 국회의원



coindesk  
KOREA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원



bithumb

UPbit



Paycoin

GOPAX

# 가상자산업권법의 추가적 쟁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종수



1

## 목 차

- I. 가상자산의 분류
-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III. DeFi의 포섭



2

## I. 가상자산의 분류

### ■ 가상자산 규제와 가상자산의 분류

- 기존 규제와 가상자산법과의 관계
  - (1) 기존 규제 적용 가능한 것은 기존 규제 적용하는 방안
  - (2) 기존 규제 적용 가능하더라도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 수정하는 방안
  - (3) 가상자산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규제 체제 수립하는 방안
- 가상자산의 분류
  -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수립 vs. 가상자산 규제 공백의 보완
  - 규제 공백의 보완은 위 (1)번 방안
    -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류 검토
  - 특히 증권성을 갖는 가상자산의 규제 문제
    - 증권성의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을 일반적인 증권 규제와 다르게 취급할지 여부
    - 증권성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여부

3

3

## I. 가상자산의 분류

### ■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유틸리티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와 실제 자산에 대한 권리 기반의 가상 자산이 증권 규제 체제로 포섭되지 못하면서 지불형 가상자산이 갖는 지급 결제 수단과 가치저장 수단의 역할이 다시 부각됨
  - 특히 법정화폐가 배제된 DeFi에 대한 관심과 사업모델의 등장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특히 가격변동의 리스크가 배제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 기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의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관계가 불명확한 상황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이를 포섭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법을 개정, 운영하거나 가상자산산업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고민

4

4

## I. 가상자산의 분류

### ■ MiCA 사례

- 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 2020. 9. 24. EC(European Commission)가 채택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포함
  - DLT의 진흥과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 제안
- MiCA 의 가상자산 분류
  -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적용대상을 전제로 암호자산을 3가지로 분류
    - 유틸리티 토큰
    - Asset-referenced tokens : 복수의 상품, 암호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들의 묶음(reserve assets)에 연동되어 가격을 유지하는 토큰
    - e-money tokens : 한개의 법정 화폐에 연동되는 토큰

5

5

## I. 가상자산의 분류

### ■ MiCA 사례

- 스테이블 코인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규정
  -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
  -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중요성과 파장에 대한 경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에 따른 차등규제 표명

6

6

##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 문제점

- 가상자산산업권법과 발행시장
  - 규제공백 내지 흠결을 치유해서 규제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게 각국의 규제 흐름이고 가상자산산업권법의 목적
  - 국내는 여전히 제도화에 대한 소극적 입장으로 체계적인 규제 체제 미비
  - 특금법이나 세법 등의 제한적 규제
    -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공백이나 흠결을 방지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 못함
  -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 외에 발행시장도 업권법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ICO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화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입장
  - 유통시장의 전 단계인 발행시장을 방지하면서 유통시장만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 가능

7

7

##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 발행시장

- 현황
  - 2018년에 정점을 찍었던 ICO 시장은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 개발자금 조달 방안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부정적 인식 확산과 정부의 압력으로 현재는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
  - 규제 측면에서 보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사전규제제도 외에는 아무런 사전 규제근거가 없고 사기, 배임, 유산수신행위, 다단계등의 사후규제 적용 가능성만 존재
  - 법적 근거마련이나 제시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함으로써 규제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
  -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8

8

##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 해외 사례

- 미국
  - 발행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 : 원칙적으로 증권법에 의한 규제
  - 발행시장이라 할 수 있는 ICO 규제는 기본적으로 증권발행 영역으로 취급하여 SEC가 연방법 차원에서 규제하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함
  - 증권성 판단 위한 Howey Test의 해석 확대

9

9

##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 해외 사례

- 프랑스
  - ICO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 프랑스 하원은 2018. 9. 12. ICO에 대한 법적프레임을 규정하는 입법을 승인하였고,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PACTE(Th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기업 성장 및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 입법됨
  - ICO에 적용될 자세한 규정과 토큰의 개념을 정의
  - 프랑스에서 설립된 법인이 ICO를 시도 하는 경우 발행인은 프로젝트의 내용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정보 문서를 제출하고, AML과 KYC를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금융시장청(AMF)이 승인
  - AMF는 ICO 프로젝트와 2차 거래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 공개

10

10

## II. 가상자산 발행시장의 규제

### ■ 해외사례

- MiCA 4.2 Selling and promoting crypto-assets (Title II)
  - 프로젝트의 성격, 권리, 의무, 기반 기술에 관한 핵심정보를 담은 백서를 발행하여 공표 20일 전까지 규제기관에 공유, but 승인은 불요
  - 적격투자자나 각 회원국 당 150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개월 간 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에어드랍 등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채굴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EU에서 이미 이용가능한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 투자자는 비상장 암호자산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14일 내에 취소 가능
  -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준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지 처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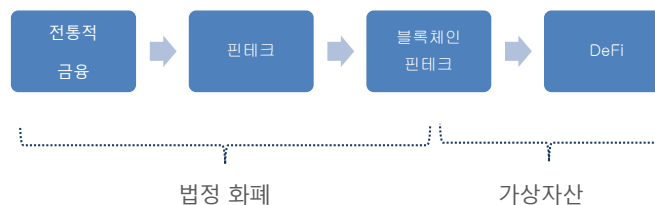
11

11

## III. DeFi

### ■ DeFi의 의미

- 개념적 요소
  - 신뢰를 보증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
  - 스마트 계약을 통한 계약 내용 실행
  - 법정 화폐가 배제된 가상자산 기반 금융



12

12



### III. DeFi

#### ■ DeFi의 규제

- 본래 의미의 DeFi 사업에 대한 규제의 공백
  - FATF는 DeFi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 DeFi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특금법상 VASP의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AML, KYC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음
  -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가 제기될 수 있으나 소극적 해석이 유력
  - 법정화폐 기반의 기존 금융업 등의 인허가 대상 아닌 것으로 해석
  - 법정 화폐와 중앙기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상자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사업모델의 적정성과 이용자의 보호 문제는 중요
- 향후 DeFi는 상당한 진화와 변화를 겪을 전망
  - 규제 포섭 시기와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13

13

## Thank you

jay.yoon@leeko.com

Lee  
& KO

14